

# 말레이시아의 경쟁법·제도 및 사건처리절차

2022. 8.



공정거래위원회



# CONTENTS



+++++

I. 경쟁법 및 경쟁당국 개요 .....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경쟁법 주요 내용 .....	3
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 .....	3
2.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.....	8

III. 사건처리절차 .....	12
-------------------	----

IV. 기업들이 유의할 점 .....	19
----------------------	----

## I 경쟁법 및 경쟁당국 개요

### ■ (경쟁법) 말레이시아 경쟁법(Competition Act 2010, 이하 “경쟁법”)

- (규율행위) ① 경쟁제한적 합의,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

※ 현행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기업결합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
- (적용제외) 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나 행위, ②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환경 협상에 대한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는 노동조합 간 합의나 집단행동, ③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자가 자사에 할당된 특정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경쟁법 적용대상이 아님

– 통신멀티미디어법(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), 에너지위원회법(Energy Commission Act), 석유발전법(Petroleum Development Act), 석유규제(Petroleum Regulations), 항공위원회법(Malaysian Aviation Commission Act)에 따른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

- (역외적용) 말레이시아 영토 밖에서 행해진 상업적 활동이라도 말레이시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쟁법 적용

### ■ (경쟁당국)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(Competition Commission, 이하 “MyCC”)

- (주요 역할) MyCC는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(Commission)와 조사 및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되며, MyCC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쟁심판위원회(Competition Appeal Tribunal)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
- **(조직구성)**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7개 국으로 구성됨



## Ⅱ 경쟁법 주요 내용

### 1 경쟁제한적 합의 금지

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수평적 및 수직적 합의는 금지됨(경쟁법 제4조)

#### 가.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합의 의미

##### ■ 시장에서 경쟁을 현저하게 방해·제한·왜곡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 사업자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합의 금지

- 이 때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간 형성된 모든 형태의 합의를 의미함
  - － 전화, 편지 등 서면 또는 구술로 표현한 모든 의사표현에 대해 합의 추정 가능

#### 나. 금지되는 경쟁제한적 합의 유형(경쟁제한적 합의 가이드라인 제3항)

##### ■ 경쟁제한적인 수평적 합의

- ① 직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이나 기타 다른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합의 (Price fixing)
  - － 상품 가격 인상율, 할인율, 운송비용 등을 정하는 경쟁사업자 간 합의
- ② 시장이나 공급원 분할에 관한 합의(Sharing markets or sources of supply)
  - － 특정 소비자 또는 특정 공급원에 대해서만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합의

③ 생산, 판매처나 시장에 대한 접근, 기술개발, 투자 등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합의 (Limiting or controlling)

④ 입찰담합(bid-rigging)

– 당사자 중 한명만 입찰하기로 정하거나, 사전에 낙찰예정자 순서를 정하는 합의 등

### ■ 경쟁제한적인 수직적 합의

① 재판매가격 유지(RPM, Resale Price Maintenance)

– 최고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권장유통가격을 정하는 등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

② 구매강제(Requiring A Buyer Must Buy All or Most Supplies)

– 구매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자사 상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의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합의

③ 소비자 분할에 관한 합의(Exclusive Customer Allocation)

– 공급업자가 특정 소비자 집단에게만 판매하기로 유통업자와 합의하는 경우

④ 선불거래(Up Front Access Payments)

– 유통망에 접근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유통업체에게 선불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 관련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 또는 기타 경쟁사업자의 접근 차단 정도를 고려하여 경쟁제한성 판단

■ **(안전지대)**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

- (수평적 합의) 결합시장 점유율이 20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
- (수직적 합의) 사업자의 개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25%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

#### 다. 예외적 허용

■ **(적용면제)** 경쟁법상 금지되는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(경쟁법 제5조)

##### 적용면제 해당요건

- 해당 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명백하게 기술적 효율성이 개선되거나 사회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
- 당사자가 해당 합의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해당 합의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불가피한 경우
- 해당 합의가 유발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경쟁에 미치는 이익에 비례하는 경우
-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

■ **(개별적용제외)** 경쟁법상 금지되는 합의에 해당하더라도 경쟁법 제6조상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는 MyCC에 적용제외 허용신청(경쟁법 제6조)

- MyCC는 특정 조건 또는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, 해당 명령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여 허용할 수 있음
- 허용 이후 경제상황이 상당히 변화하거나, 사업자의 상기 의무 불이행시 ① 적용제외 취소, ② 조건 또는 의무 변경, ③ 조건 또는 의무 추가 부과 가능(경쟁법 제7조)

■ **(일괄적용제외)** MyCC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합의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제외 가능(경쟁법 제8조)

- 일괄적용제외 대상 사업자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나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
  - 사업자가 조건이나 의무 불이행시 일괄적용제외 일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
  - 특정한 합의가 적용제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, 해당 합의에 대한 일괄적용제외를 취소할 수 있음
- MyCC는 일괄적용제외의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해서 공표해야함(경쟁법 제9조)
  - 최소 30일 이상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수렴된 의견을 신중히 심사해야 함

라. **자진신고감면제도**(경쟁법 제41조)

■ **경쟁제한적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도 자진신고시 최대 100%까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**

- **(감면요건)** ① 범위만 사실을 인정하고, ② 해당 사건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MyCC에 협조하는 경우
- **(고려사항)** 책임면제의 범위는 해당 신고인이 최초 신고인인지 여부, MyCC의 사건조사에 협조적인지 여부, 현재 사건 진행단계 등에 따라 달라짐
- **(면제범위)** MyCC의 제재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나,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민사소송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



#### 자진신고서 포함내용(자진신고감면제도 가이드라인 제6항)

- 경쟁제한적 합의날짜, 장소, 목적,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
- 해당 합의에 대한 녹취록 등 증거물 또는 증거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
- 신고인 연락처, 해당 합의 관계자들의 명단, 직위, 연락처 등
- 기타 MyCC가 신고내용 검토 시 필요한 관련 정보 등

- (비밀보장) 신고인은 신고사실을 발설해서는 안되며, 신고인의 신분 등에 대한 정보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됨

### 마. 위반시 제재

- (임시중지명령)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특정인에게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,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 부과(경쟁법 제35조)

- (행정제재) 과징금, 시정명령 부과 대상(경쟁법 제40조)

- (과징금) 경쟁법을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%까지 부과 가능
- (시정명령) 해당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

- (사적구제)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경쟁법 제64조)

#### 사례 ①

#### Cameron Highlands 화훼협회의 가격인상 (2012)

- 화훼협회인 Cameron Highlands가 2012년 3월부터 상품 가격을 10% 인상하여 경쟁법 제4조의 경쟁제한적 합의금지조항을 위반한 사건
- 말레이시아 경쟁법이 적용된 최초의 사건으로, MyCC가 협회의 활동도 경쟁법 적용대상인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함
- MyCC는 가격인상행위 중지 및 관련 시장에서 기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부과함

##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

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금지됨(경쟁법 제10조)

### 가.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(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이드라인 제2조)

#### ■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현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

-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%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
- 그 외에도 MyCC는 제품차별화,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자 존재유무,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, 시장 진입장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결정

### 나. 금지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(가이드라인 제3항)

#### ■ 착취적 남용행위

- 가격남용을 통해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
  - 공급가격, 비용,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착취남용 여부를 판단

#### ■ 배제적 남용행위

##### ①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(Predatory Pricing)

-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

② 가격 차별행위(Price Discrimination)

- 동일한 상품을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

③ 배타적 거래행위(Exclusive Dealing)

- 특정 사업자에 대해 배타적 조건을 부과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

**배타적 거래행위의 사례**

-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기존 경쟁사업자의 시장확장 방해 행위
-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
-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참여한 시장이나 상부·하부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

④ 로열티 리베이트 및 할인(Loyalty Rebates and Discounts)

-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로열티를 리베이트하거나 할인하는 행위

⑤ 필수설비 등 공급 거절(Refusal to Supply and Sharing of Essential Facilities)

- 특정 사업자에 대한 상품 공급, 지식재산권 라이선싱, 필수설비 접근을 거절하는 행위

⑥ 주요 원자재 또는 중간재 매입(Buying Up Scarce Intermediate Goods or Resources)

- 경쟁사업자의 상업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중간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매수하는 행위

## ⑦ 구입 강제(Bundling and Tying)

- 상품을 결합시켜 저렴하게 판매하여 구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

### 시장조사

- MyCC는 직권 또는 소비자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또는 왜곡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(경쟁법 제11조)
- 시장구조, 사업자 행위, 공급업체 또는 소비자 행태, 기타 경쟁 관련 문제 등을 조사
- 조사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공개(경쟁법 제12조)하며, 해당 결과보고서는 강제성없는 권고적 성격을 가짐

## 다. 위반시 제재

- **(임시중지명령)**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특정인에게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,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 부과(경쟁법 제35조)

- **(행정제재)** 과징금, 시정명령 부과 대상(경쟁법 제40조)

- **(과징금)** 경쟁법을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%까지 부과 가능
- **(시정명령)** 해당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

- **(사적구제)**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경쟁법 제64조)

사례  
②

### Dagang Net Technologies의 배타적 거래행위 (2021)

- 온라인 B2G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Dagang Net Technologies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게 배타적 조건을 부과하여 경쟁법 제10조를 위반한 사건
- MyCC는 Dagang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업체에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
- MyCC는 Dagang의 배타적 거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1천만 링깃(약 29억원)의 과징금을 부과함

※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별도의 기업결합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으나, 기업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가능성 감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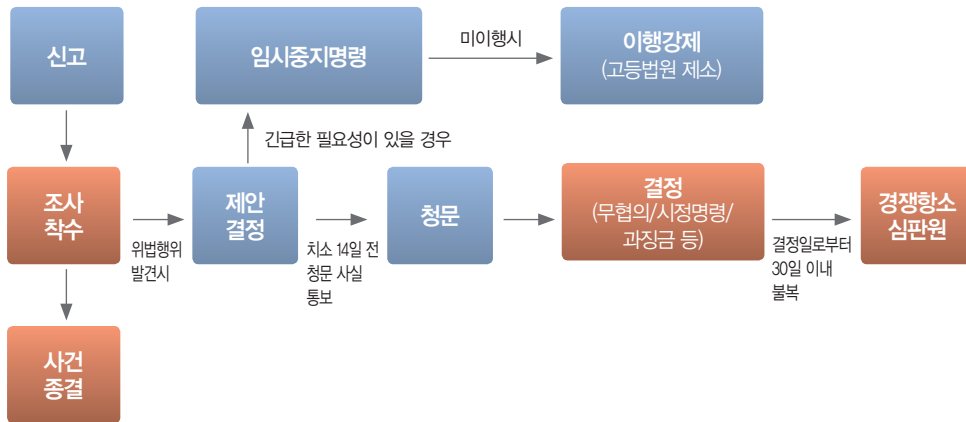
사례  
③

### 그랩·우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(2021)

- 공유승차플랫폼인 그랩은 그랩 운전사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광고나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한함
- MyCC는 그랩이 우버와의 기업결합 이후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다고 판단하고, 그랩의 경쟁법 제10조 위반행위(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)에 대해 약 8천7백만 링깃 (약 253억원)의 과징금을 부과
- 그랩은 MyCC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

### Ⅲ 사건처리절차

#### 사건처리절차 개요도



■ **(조사착수)** MyCC는 직권이나 신고 또는 소비자상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(경쟁법 제14조)

- **(사전신고)** 누구나 MyCC에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인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법위반 행위자를 특정하여 신고해야 함  
(경쟁법 제15조)
- **(조사대상)** ① 경쟁제한적 합의(경쟁법 제4조),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(경쟁법 제10조)

■ **(사건종결)** 조사개시 이후라도 ① 동의를결절차에 따라 사건 조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, ② MyCC의 자원만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(경쟁법 제16조)

- MyCC가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할 경우, 신고인에게 종결 사실과 그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통지해야 함

■ **(조사권한)** MyCC 조사관은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에 관련해서는 형법(Criminal Procedure Code, Act 593)에 따른 경찰의 수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함  
(경쟁법 제17조)

- **(정보수집)** MyCC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사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(경쟁법 제18조)

– MyCC는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간만큼 보관할 수 있으며, 해당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공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함

– 해당 자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MyCC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자료를 반환해야 함

- **(정보접근)** MyCC가 이 법에 따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해 접근하도록 허용해야 하며, MyCC의 지시 불이행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 
(경쟁법 제20조)

- **(비밀엄수의무)**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밀정보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(경쟁법 제21조)

– 비밀정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상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의미함

–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개인은 처벌 대상이 되나,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를 허용함

### 정보공개 예외적 허용사유

- 해당 정보를 획득한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MyCC의 역할 및 권한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
- 해당 정보공개가 경쟁법에 따른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, MyCC나 CAT의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
- 해당 정보공개가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
- 외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따라 MyCC가 공개를 허용한 경우

- **(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인멸)** 관련 증거나 자료 등의 제출 거부 또는 누락, 허위자료 제출, 증거인멸행위 등은 처벌 대상에 해당(경쟁법 제23조 및 24조)

### ■ **(압수수색)** 법원은 MyCC 조사관의 청구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(경쟁법 제25조)

- 무단으로 관련 증거 등을 훼손한 자는 처벌 대상임
- 증거 인멸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MyCC 조사관은 영장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음(경쟁법 제26조)

### ■ **(처벌규정)** 절차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

- **(법인)** 최초 위반 시 5백만 링깃(약 14억 원) 이하, 2회 이상 위반 시 1천만 링깃(약 29억 원) 이하의 벌금 부과(경쟁법 제61조)
  - － 법인의 임원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해당 법위반행위를 알 수 없었거나 미리 막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함(경쟁법 제63조)
- **(개인)** 최초 위반 시 1백만 링깃(약 2.9억 원)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(병과 가능), 2회 이상 위반 시 2백만 링깃(약 5.8억 원)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(병과 가능)부과(경쟁법 제61조)



■ **(임시중지명령)** MyCC는 경쟁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(경쟁법 제35조)

- ① 특정인에게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,  
②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임시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범위반협회가 있는 합의나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, 금전적 지급 등은 명령 대상이 아님
- MyCC는 당사자에게 임시중지명령 부과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
- MyCC는 임시중지명령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, 임시중지명령은 조사 종결일 또는 해당 명령이 부과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중 빠른 일자에 효력 상실

■ **(제안결정)** 조사결과 경쟁법 실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MyCC는 서면으로 제안된 결정(proposed decision) 내용을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함(경쟁법 제36조)

- MyCC는 결정 내용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정보를 알려야하며, 범위반행위에 대해 MyCC가 제시하는 시정조치 또는 제재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
- 당사자는 제안결정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

■ **(구술진술)** 당사자는 제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MyCC에 구술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(경쟁법 제37조)

- MyCC는 진술 일자, 장소 등을 정하여 당사자, 신고인 등에게 통보해야 함

■ **(청문절차)** MyCC는 언제든지 당사자의 경쟁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(경쟁법 제38조)

- 공청회 개최 결정일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에게 개최 사실과 일자, 장소,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함

■ **(무혐의 결정)**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, MyCC는 지체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무혐의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(경쟁법 제39조)

■ **(법위반 결정)** 법위반 사실 발견 시 MyCC는 의결일로부터 해당 행위 중지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(경쟁법 제40조)

- MyCC는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해당 결정의 내용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함
-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%까지 부과 가능

■ **(이행강제)** MyCC는 당사자가 임시중지명령이나 최종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(High Court)에 제소 가능(경쟁법 제42조)

- 고등법원은 당사자가 임시중지명령 또는 최종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, 과징금 미납행위에 대해서는 지불만기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
- 고등법원 명령 불이행시 법정모독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됨

■ **(동의의결)** 경쟁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원상회복이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(undertaking)을 MyCC에 제안할 수 있음(경쟁법 제43조)

- MyCC는 법위반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,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
- 동의의결 내용은 MyCC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되어야함
- 동의의결은 MyCC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

■ **(사적구제)** 경쟁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(경쟁법 제64조)

■ **(불복절차)** MyCC의 임시중지명령, 무혐의결정 또는 법위반결정에 대해서는 경쟁심판 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(경쟁법 제51조)

**경쟁심판위원회**

- 위원장 1명과 7~20명의 심판관들로 구성된 경쟁법 전문 심판기관
- 심판원장은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되고, 심판관들은 산업·경제·법·소비자보호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,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임기는 최대 6년임
- 경쟁심판위원회는 하급법원에 관한 법률(Subordinate Courts Act 1948)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, 증인선서, 심판정 모욕행위 처벌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

- MyCC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경쟁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이 때 이의신청서의 사본을 MyCC에도 제출해야함

- 신청인이 경쟁심판위원회에 MyCC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, 경쟁심판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MyCC의 결정은 효력을 가짐 (경쟁법 제53조)
- 경쟁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판관의 다수결로 결정하며,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음(경쟁법 제58조)
  - ① MyCC에 회부, ② 과징금 부과·취소·경정 결정, ③ 특정 시정조치 명령 또는 기타 MyCC의 시행가능한 조치 부과 등
- 경쟁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고등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(경쟁법 제59조)



## IV 기업들이 유의할 점

### 1 법 위반 예방 노력이 최선

#### ■ 사전 내부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위반 예방활동을 추진할 필요

- 말레이시아 경쟁법 위반 시 과징금,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질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도 있으므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의

#### ■ 경쟁제한적 합의의 경우 MyCC에서 특정 조건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경쟁법 적용면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용면제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

- 경쟁제한적 합의에 가담한 경우라도 MyCC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100%까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비밀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 적극 활용

### 2 경쟁당국의 조사에 대한 협조

#### ■ 조사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는 벌금이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벌 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

(경쟁법 제23조 및 제61조)

- 법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MyCC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필요

### 3 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

- MyCC는 경쟁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사건 조사 건수가 약 15배가량 증가하는 등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고 있음('12년 11건→'19년 167건)
  -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따라 경쟁법 집행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MyCC의 법집행 동향을 적극 파악하고 주목할 필요
- 또한 MyCC는 기업결합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시행시 기업결합 관련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지침을 숙지할 필요

◆ 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발간한 것으로  
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.

-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: 044-200-4326
-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경쟁정책동향: <http://www.ftc.go.kr/icps>

◆ 더불어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- 외교부 말레이시아 국가정보: [www.mofa.go.kr/www/nation/m\\_3458/view.do?seq=14](http://www.mofa.go.kr/www/nation/m_3458/view.do?seq=14)
- 주말레이시아대사관: [overseas.mofa.go.kr/my-ko/index.do](http://overseas.mofa.go.kr/my-ko/index.do)
-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: [world.moleg.go.kr](http://world.moleg.go.kr)
- 대한무역투자공사: [www.kotra.or.kr](http://www.kotra.or.kr)
-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: (홈페이지) [mycc.gov.my](http://mycc.gov.my)(대표번호) (+60) 3-2273-2277





공정거래위원회